

■ 문화일보 2011년 1월 26일(수)

## “지속적 생활지원으로 안전사고 최소화해야”

전국쪽방상담소協 윤승걸 대표



“자치구별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벌여야 합니다. 또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지원을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쪽방 주민들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전국 10개의 쪽방촌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윤승걸(44·사진) 대표는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쪽방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주거 형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표는 “쪽방촌 거주자 대부분은 당장 일거리가 없으면 일세나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나야 하는 예비 노숙인”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쪽방촌이 완전한 거주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숙인이나 다름없는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전국의 쪽방촌 주거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면서도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최저소득계층들의 주거지인 만큼 쪽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쪽방 관리가 지자체의 자율이나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지원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쪽방촌 주민들을 일종의 ‘홈리스(homeless)’로 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쪽방 거주자들은 사실상 노숙자와 같은 미주택자, 주거불안계층으로 봐야 한다”며 “노숙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에 쪽방 거주자들까지 폭넓게 적용시켜 그들의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실제 대구에는 쪽방 거주자 50여명이 자치단체의 임대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